



Received: 2026/05/02
Revised: 2026/05/13
Accepted: 2026/06/04
Published: 2026/06/30

***Corresponding Author:**

In-Hyeok Yu

32801, Unit 111, No. 1003, 98 Sindoan 2-gil,
Sindoan-myeon, Gyeryong-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E-mail: dlsgr123456@naver.com

Abstract

본 연구는 전쟁사 속 억제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한반도 전장에서 해군의 억제 전략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억제의 핵심 요소로 능력(capability), 신뢰성(credibility), 소통(communication)의 3C 모델로 설정하고, 태평양전쟁과 포클랜드전쟁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억제 실패는 단순한 군사력 부족이 아니라 상대가 인식하는 전력 배치의 취약성, 대응 의지에 대한 불신, 레드라인과 보복 의지의 불명확한 소통이 결합될 때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해상기반 응징·거부능력을 강화하고, 반복훈련과 즉응태세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며, 북한의 오판을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억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applying naval deterrenc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by analyzing historical cases of deterrence failure. Using the 3C model of deterrence—capability, credibility, and communication—this study examined the Pacific and Falklands Wars. The analysis showed that deterrence failed because of not only insufficient military power, but also perceived capability gaps, doubts about political and military resolve, and the ambiguous communication of red lines and consequen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public of Korea Navy should strengthen maritime-based punishment and denial capabilities, enhance credibility through repeated exercises and readiness, and communicate clear deterrent signals to prevent North Korean miscalculation.

Keywords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해군력(Naval Power), 3C 모델(3C Model),
태평양전쟁(Pacific War),
포클랜드전쟁(Falklands War),
한반도(Korean Peninsula)

전쟁사 분석을 통한 해군의 억제 (Deterrence) 전략 적용 방안 연구: 억제이론과 해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Naval Deterrence Strategy Through War History Analysis: Focus on Deterrence Theory and the Role of the Navy

유인혁*

해군 소령/해군대학 지휘참모과정 학생장교

In-Hyeok Yu*

LCDR, ROK Navy/Student officer of Naval Commander & Step Course, ROK
Naval War College

1. 서론

손자병법은 약 2,500여 년 전 쓰여진 글이지만 현재까지도 동·서양 최고의 군사전략서로 평가받고 있다. 손자병법의 도입부인 제1절 “계(計)”는 “전쟁은 나라의 중요한 업무이며 그것은 군대와 백성의 생사, 나라의 존망과 관계되어 성실히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구로 시작된다([1], p. 27). 전쟁은 언제나 국가의 중대사이지만, 현대에는 손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을 포함하여 전쟁의 파괴력이 재앙적 수준으로 진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며, 절령 군사적으로 승리하더라도 국가가 감내해야 할 비용과 후유증이 과도하게 커지는 선택이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30%에 가까운 급격한 감소를 기록하였고, 러시아 역시 국제 제재와 전쟁비용 부담으로 인한 성장 둔화에 직면하였다[2]. 이러한 현실은 손자병법 제3절 “모공(謀攻)”에서 “백번 작전하여 백번 이기더라도 최상은 아니며, 계략으로 이겨서 전투를 하지 않고도 적이 굴복하게 되는 것만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 부를 수 있다.”고 언급한 “부전승(不戰勝)” 사상과도 연결된다([1], p.

49). 이는 상대가 특정 행동(특히 무력 사용)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deterrence)”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한국군의 국방목표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3], p. 39)이므로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전쟁사 속 억제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한반도 전장에서 해군이 억제전략을 적용하는 방안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억제(Deterrence)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억제는 적의 군사행동을 포기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정책이다. 억제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4], p. 37).

2.1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

상대방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얻을 이익보다 훨씬 큰 고통스러운 비용을 가할 것임을 위협하여 공격 의사를 꺾는 방식으로 작동된다([4], pp. 38-39). 즉, 응징적 억제는 적이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이득보다 손실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예상하게 만들어 군사행동의 시도를 단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징적 억제의 개념은 우리 군의 3축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이 응징적 억제의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다([3], p. 60).

2.2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대응능력을 사용하여 발생 가능한 공격자의 이익을 거부하는 개념이며, 효과적인 방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즉, 공격하려는 상대방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억제를 달성한다([4], p. 38). 거부적 억제는 상대가 공격을 통해 기대하는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방어능력을 구축함으로써 공격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핵심은 상대에게 “공격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다. 우리 군의 3축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와 킬체인(kill chain)이 거부적 억제의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다([3], p. 59).

2.3 재래식 억제(Conventional Deterrence)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 의지를 저지하는 개념이다. 재래식 억제는 응징적 혹은 거부적 억제의 형태로 모두 구현될 수 있으며,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 및 국지전 억제를 수행하는 핵심 수단이다. 억제이론은 핵전략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전통적인 핵 금기(nuclear taboo), 한·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¹⁾의 신뢰성 등 이유로 재래식 전력을 통한 억제가 중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다([5], pp. 8-12). 재래식 억제는 핵사용의 문턱 아래에서 도발을 차단하는 1차적 억제 수단이며,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동맹과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4 분석의 틀(Framework of Analysis)

억제의 개념은 핵무기 등장 이후 전쟁의 파괴력이 재앙적 수준으로 진화함에 따라 등장하였으며, 응징적 억제를 기반으로 거부적 억제, 재래식 억제 등이 추가적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²⁾ 이러한 억제의 핵심은 3가지로 능력(capability), 신뢰성(credibility), 소통(communication)으로 구분된다[6].³⁾ 능력은 상대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신뢰성은 상대가 실제로 보복받을 것으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고, 소통은 상대가 군사행동을 하면 어떠한 피해를 주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분명히 알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억제 메커니즘의 작동 근간은 예상되는 보복에 대한 공포, 즉 응징적 억제이며, 억제의 실패는 단순히 군사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의 3C인 능력(capability), 신뢰성(credibility), 소통(communication) 중 하나 이상이 상대에게 왜곡되거나 오판될 때 나타난다. 이 3가지 요소를 통해 전쟁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표현이 동일시하여 쓰이기도 함.

2) 거부적 억제 수단의 핵심인 미사일방어 체계는 1960년대부터 도입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개념이 정립이 시작되었음.

3) Thomas C. Schelling이 그의 저서 『Arms and Influence』에서 억제를 교섭력의 문제로 논의했고,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억제의 3C로 정립되었으며, 미 합참에서도 억제의 “Three Cs”를 사용하고 있음.

3. 전쟁사속 억제 실패사례 분석

3.1 태평양 전쟁(1941)

3.1.1 능력(Capability)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해군 강국들은 워싱턴 조약(1922)을 통해 해군 군축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은 전함과 중순양함을 중심으로 한 거함거포주의 전력 증강을 제한하였다. 미국·영국·일본 간 전함 보유 비율을 5:5:3으로 규정하고, 신형 전함 건조를 장기간 금지함으로써 전통적인 해군력 증강 경로가 봉쇄되었다. 이때 이 조약은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두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건조가 중단된 전함 선체를 항공모함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일본은 1930년대 들어 항공모함의 집중운용을 통한 타격 등 교리가 발전하였다([7], pp. 174-192). 아래는 태평양상 각 국가의 전력을 비교한 표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전체 해군력 대비 태평양 전진배치가 취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장기전에서는 승산이 낮지만, 단기적으로 진주만 공습을 통해 초기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의 전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Table 1. Comparison of Japanese and Allied Naval Forces in the Pacific, Autumn 1941 ([8], p. 118)

Category	Battle ships	Aircraft Carriers	Cruisers	Destro-yers	Subma-rines
United States	9	3	24	80	56
United Kingdom	2	0	8	13	0
Netherlands, France	0	0	4	7	13
Allied Total	11	3	36	100	69
Japan	10	10	36	113	63

3.1.2 신뢰성(Credibility)

일본은 미국이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은 할 수 있지만, 아시아·태평양에서 본격적인 총력전을 감수할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에는 1930년대 미

국의 고립주의 분위기, 제2차 세계대전 유럽방면 전역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정책, 직접적인 참전 회피 노력 등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일본 지도부는 미 함대를 기습해 큰 타격을 주면, 미국은 오히려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가졌고([9], pp. 91-94), 이는 미국 억제의 신뢰성이 일본의 인식(perception) 속에서 크게 훼손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3.1.3 소통(Communication)

미국은 일본의 동남아 진출에 대해 자산동결·석유 금수 등 강력한 경제 제재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침략을 계속하면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조건부적인 군사적 경고는 모호했다. 일본은 제재를 풀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국은 이를 전면전 의지라기보다 협상용 압박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10], pp. 36-59). 결국 양측 모두 상대의 레드라인과 한계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신뢰성 있는 의사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억제를 위한 소통에 실패했다.

3.1.4 소결론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의 억제는 군사력 총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태평양 전구에서의 전진배치 취약성, 미국의 참전 의지에 대한 일본의 오판, 그리고 상호 레드라인 소통 실패가 결합되면서 실패하였다. 이는 억제가 객관적 능력보다 상대가 인식하는 능력과 의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 포클랜드 전쟁(1982)

3.2.1 능력(Capability)

영국은 1981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나토 임무에 집중할 것, 그리고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이전부터 영국이 고수했던 국방 기조로 나토 역외 지역에서 의 역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해군의 해상 원정전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1], pp. 273-276).⁴⁾ 이러한 점으로 인해 포클랜드 전쟁 이전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군사적 능력, 특히 원해에서의 해군력 투사 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 본토부터 약 13,000 km 떨어진 지역으로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해당거리에서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모중심 해군력과 보급능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지리적 근접성, 육·해·공의 전반적 능력을 평가하여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섬을 점령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3.2.2 신뢰성(Credibility)

영국은 국방예산 감축 기초, 포클랜드 주민의 영국 국적·지위 문제도 애매하게 처리하는 등 포클랜드의 중요도에 대해 모호한 신호를 보냈다. 1966년에 영국은 문서화된 형식은 아니었지만, 아르헨티나에게 포클랜드 섬의 주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영국 정부로서는 포클랜드가 전략적 면에서 중요하지 않았지만 주권 양도 협상은 포클랜드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반대로 17년 동안이나 진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12], pp. 56-59).⁵⁾ 또한, 포클랜드에 상주하던 해군 전력의 축소되는 등의 조치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13], p. 327). 아르헨티나와의 외교협약이 진행되면서, 아르헨티나 군부는 영국은 섬 방어를 위해 대규모 원정전을 벌일 의지가 없다고 오판하게 되었다. 즉, 영국이 가진 군사력과 별개로 그 힘을 포클랜드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이 아르헨티나의 인식 속에서 매우 낮았던 것이다.

3.2.3 소통(Communication)

영국 정부는 포클랜드의 최종 지위, 방위공약 수위에 대해 국내 정치·예산 압박을 의식해 명시적이고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섬을 침공하면 군사적 수단으로 되찾겠다는 식의 조건부·구체적 경고가 없었고, 오히려 1960년대부터 감축·협상 제스처

가 나가면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영국이 포클랜드를 핵심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또한 국내 정치위기를 돌리기 위해 애국전쟁 카드를 선택하면서, 외교 채널에서는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군 내부에서는 점령 준비를 진행했다. 영국은 이를 충분히 강한 군사적 위협 시그널로 읽지 못했고, 억제에 위한 적극적 소통에 나서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상호간에 어디까지 하면 전쟁인지에 대한 레드라인이 명료하게 공유되지 않았고, 억제에 필수적인 소통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아르헨티나의 침공을 막지 못했다.

3.2.4 소결론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억제는 전력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아르헨티나가 인식한 영국의 능력과 의지 부족 때문에 실패하였다. 영국의 국방예산 감축, 원해 해군력 축소, 포클랜드 주권 협상은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영국이 대규모 원정전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유발하였다. 또한 영국은 침공 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명확한 레드라인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였다. 결국 포클랜드 전쟁은 억제에서 실제 군사력뿐 아니라, 상대가 그 능력과 의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4. 한반도 전장에서 억제 전략 적용 방안 및 함의

앞선 사례는 억제가 단순히 군사력 총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인식하는 능력(capability), 신뢰성(credibility), 소통(communication)의 명확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미국의 장기적 산업·군사력보다 태평양 전구에서의 해군력 전진배치 취약성과 미국의 참전 의지에 주목하였고, 포클랜드전쟁에서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원해 투사 의지와 능력을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전장에서 해군의 억제 전략은 보유 전력의 양적 확충을 넘어, 북한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해상기반 응징능력, 도발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거부능력과 전력의 배치 그리고 오판을 차단하는 명확한 신호전달 체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억제는 단순한 군사력 보유가 아니라 상대의 인식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⁴⁾ 해병대 폐지까지 검토되었으나, 상륙수송함(LPD)만 폐선하기로 결정함.

⁵⁾ 1981년 여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주권 양도 협상에서 아르헨티나 측의 협상을 주도했던 Carlos Cavandoli는 국내정치 상황상 가시적인 협상 효과가 필요하며 영국 협상단에게 사정을 할 정도였음([12], pp. 56-59).

4.1 한반도 전장의 특수성

한반도 전장은 태평양전쟁이나 포클랜드전쟁과 달리 전장 중심이 짧고, 위기 고조에서 무력충돌까지 급박하게 전개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잠수함, 특수전, 사이버, 전자전, 회색지대 도발 등을 복합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해군 억제 전략은 대규모 전면전 억제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평시 회색지대 도발, 국지도발, 핵·미사일 위기, 전면전 등 모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적용방안

4.2.1 능력(Capability)

한반도 전장에서 해군의 능력은 단순한 전력 보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각 투사 가능한 전력과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배치가 중요하다. 해군의 평시 작전 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전력건설에 있어서 억제는 상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작동 메커니즘의 근간인 응징적 억제능력을 기반으로 적의 공격 시나리오를 무력화하는 거부적 억제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수함 전력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바탕으로 적의 선제공격 이후에도 재래식 보복 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응징적 억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대잠전력, 해상기반 미사일방어 전력은 북한의 미사일·잠수함·침투 위협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어 거부적 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해군 기동함대전력은 평시에는 현시적 억제수단으로, 위기 시에는 해상기반 타격·방공·대잠 작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4.2.2 신뢰성(Credibility)

신뢰성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과 제도화된 대응절차를 통해 형성된다. 북한이 해상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 해군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대응을 유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억제는 약화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평시부터 한미 연합 해상훈련, 전략

자산 연계훈련, 해상기반 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대응의지를 가시화해야 한다.

또한 국지도발 상황에서는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과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확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 도발도 비용 없이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북한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황이 고조될수록 재래식 보복 수단인 KMPR은 핵무기와 달리 실제 사용될 신뢰성이 높아, 북한 지도자 생존 위협으로 재래식 억제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2.3 소통(Communication)

억제에서 소통은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한계와 그 결과를 오판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한반도 전장에서 해군은 북한의 해상침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NLL 인근 무력도발, 해상교통로 위협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현재와 같이 명확한 레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대응수단과 시점은 일정 부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레드라인 인근에서 회색지대 도발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해군의 억제 소통은 명확한 경고와 제한적 모호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신행 함정 진수, 침단 무기체계 시험 성공 발표, 잠수함 작전구역의 전략적 노출 등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적에게 정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4.3 함의

이상의 논의는 한반도 전장에서 해군력이 단순한 전투수단을 넘어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군사적 수단임을 보여준다. 함정의 전개, 잠수함의 은밀한 작전, 이지스함의 미사일방어태세, 한미 연합해상훈련은 모두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기능한다. 따라서 해군 억제전략은 전시 작전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평시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작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의 억제능력은 단독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해상기반 응징능력은 공군의 정밀타격, 육군의 지상방어, 전략사령부의 통합타격체계, 한미 확장억제와 연계될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한국 해군의 억제전략은 독자적 해상전력의 생존성과 즉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합동·연합차원의 통합억제 구조 속에서 운용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동시에 태평양전쟁이나 포클랜드전쟁의 사례처럼 전력 공백이나 의지의 약화가 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해상전력의 상시 가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 우리 해군만이 가질 수 있는 은밀성(잠수함)과 정밀성(이지스함) 등을 억제제의 3C(capability, credibility, communication) 모델을 고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인 “부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3], p. 49), 즉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승리가 현대 전략 이론의 억제(deterrence)와 그 궤를 같이함을 고찰하였다. 억제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3C 모델(capability, credibility, communication)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억제는 단순한 “능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단호한 의지(신뢰성)”와 적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소통”이 결합될 때 비로소 작동함을 확인하였으며, 해군력이 단순히 전투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적의 심리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국가간의 물리적 군사충돌 억제에 집중하여 현대전의 양상인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 도발 등에 대한 억제 메커니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연구한계를 보완하여 억제이론이 AI,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등 현대전의 양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이정곤·전창빈·배일수, 중국 국방대학 손자병법 주석, 해군대학, 2025.
- [2] 김영은, ‘[그래픽] 우크라이나·러시아 경제성장을 추이,’ 연합뉴스, 2023.04.13.
- [3] 국방부, 국방백서, 2022.
- [4] 임길섭 외, 국방정책 개론, 한국국방연구원, 2020.
- [5] Jungsup Kim, ‘The Reconstitution of Extended Deterrence Policy for the Korean Peninsula: Limitations of Nuclear Umbrella and Search for Conventional Deterrence,’ National Strategy, VOL. 21, NO. 2, 2015, pp. 5–40.
- [6] Robert Peters, Justin Anderson, & Harrison Menke, ‘Deterrence in the 21st Century: Integrating Nuclear and Conventional Force,’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12, NO. 4, 2018, pp. 15–43.
- [7] Seong-Yong Park,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ter-War Development of the Aircraft Carrier in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7, NO. 2, 2011, pp. 171–201.
- [8] Young-June Park, ‘Revisiting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1906–1941: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Causes of the Hegemonic War,’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63, NO. 2, 2023, pp. 89–125.
- [9] Bruce M. Russett, ‘Pearl Harbor: Deterrence Theory and Decision Theor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 NO. 2, 1967, pp. 89–105.
- [10] Jaeik Ahn, ‘From a Japanese Asset Freeze to a De Facto Japanese Embargo: The US–UK–Netherlands Cooperation Process,’ Asia Review, VOL. 14, NO. 1, 2024, pp. 35–62.
- [11] Kyungmin Kim, ‘The Response and Dilemma to Potential Threats Reviewed Through the Falklands War,’ Military History, NO. 131, 2024, pp. 267–308.
- [12] Sang-Hyun Park, ‘Weak State Choice in Asymmetric Conflict: Falklands War in the Perspective of Prospect Theory,’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7, NO. 1, 2007, pp. 53–74.
- [13] Jung Won Cho, ‘A Rethink on The Cause in Falklands War,’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VOL. 2, NO. 2, 2009, pp. 309–334.